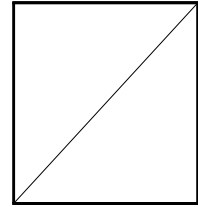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4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6. 7. (제 11 차)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6. 7.

1. 의결주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2.5.11.~2022.5.31. 기간 중 실시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하 '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40.5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회사에 과징금 5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나.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

- ☐ 회사가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보다 최소 56영업일~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태료 26.4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및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및 제15조(과태료) 제1항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2023.3.2.) 심의필
- 제1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6.1.) 심의필

<별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과태료 26.4백만원 부과, 과징금 5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이하 '회사')는 아래 (1) ~ (3)과 같이 2019.7.19.~2021.12.15. 기간 중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이 있음

- (1) 회사는 2020.12.24.~2021.5.27. 기간 중 「(무)○○○○○○ ○○○○○○ ○○」 등 3개 보험상품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 심질환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30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
- (2) 회사는 2019.7.19.~2021.5.11. 기간 중 「(무)●●●●● ●●●●●●●●● ●●」 등 2개 보험상품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업변경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변경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1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 (사례) 위험등급 1등급이었던 피보험자가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위험등급 2등급)하던 중 자택 사과나무 절지작업 도중 낙상하여 사망하자, 직업변경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으나 낙상은 변경된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3) 회사는 2020.2.12.~2021.12.15. 기간 중 「(무)○○○○○○○ ○○○○○○○○○○」 갱신헌 실손의료비보장 등 4개 보험상품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0.5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나.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9.26.~2021.7.2. 기간 중 「무배당 ■■■■ ■■■■■■■■■■ ■■■■■■■■■■」 등 4개 보험상품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최소 56영업일~최대 438영업일을 지체*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손해사정업자의 조사 지연, 인수인계시 업무누락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보험금 및 이자 기지급 완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 ~ 11. (생략)

② ~ ④ (생략)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① (생략)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나.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보험금의 감액 합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를 제기한 경우

나. 「민사조정법」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	1,000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2017.10.19>

가. 가중 사유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7.10.19>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라. 삭제 <2017.10.19>

마.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바.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2017.10.19>

6. 기본과징금의 산정 <개정 2017.10.19>

가. 삭제 <2017.10.19>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구분	고의	과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10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가 현저한 경우 - 기초서류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대한 경우 - 매우 중대하거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가 미미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차 조정) <개정 2017.10.19.>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5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 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 (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19>

라. 기 타 <개정 2017.10.19>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23.6.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26.4백만원 ■ 과징금 5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의뢰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하 '회사')는 아래 (1) ~ (3)과 같이 2019.7.19.~2021.12.15. 기간 중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이 있음

(1) 회사는 2020.12.24.~2021.5.27. 기간 중 ㉠ 등 3개 보험상품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30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

(2) 회사는 2019.7.19.~2021.5.11. 기간 중 ㉠ 등 2개 보험상품 2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업변경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변경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1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 (사례) 위험등급 1등급이었던 피보험자가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위험등급 2등급)하던 중 자택 사과나무 절지작업 도중 낙상하여 사망하자, 직업변경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으나 낙상은 변경된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3) 회사는 2020.2.12.~2021.12.15. 기간 중 ㉡ 등 4개 보험상품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0.5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나.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9.26.~2021.7.2. 기간 중 ㉢ 등 4개 보험상품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최소 56영업일~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손해사정업자의 조사 지연, 인수인계시 업무누락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보험금 및 이자 기지급 완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제15조(과태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손해보험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64	02-3145-7672